

인사이트 2050

13

불편한 대화: 갈등 구조 완화를 위한 공론장의 효능감 및 인식 격차 축소 가능성을 검증

김중배 · 정혜승





다음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 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실험하고 탐구하며
그 길을 찾고자 합니다.

LAB2050 보고서

솔루션 2050 : 심층적인 현상 분석과 진단, 대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담은 워킹페이퍼(working paper) 성격의 보고서입니다.

인사이트 2050 : 현상 분석, 개념 정의, 참고 사례 등 연구 과정의 한 부분을 따로 담은 워킹페이퍼(working paper) 성격의 보고서입니다.

인사이트 2050-13

불편한 대화: 갈등 구조 완화를 위한 공론장의 효능감 및 인식 격차 축소 가능성을 검증

발행일 2026.06.30.

저자 김중배(LAB2050 대표) · 정혜승(

발행기관 LAB205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 길 41, E08 호
(서교동, 로컬스티치 크리에이터 타운 서교)
www.lab2050.net

© LAB2050 2026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본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인용하려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2026 년 5 월, LAB2050 과 재단법인 빠띠 주관 및 경 공익법센터 후원으로 개최된 청년 시민 대화 실험 <불편한 대화: “공정이란 무엇인가”>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독립 보고서입니다. 청년 세대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자 마련된 실제 공론장의 효능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기존 자료의 요약이나 발췌가 아닌 이번 대화 실험만의 독창적인 결과와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녹취 인용은 내부 정리의 실명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외부 공개 시 전원 익명 처리(A-G)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 개인정보(연락처 등)는 일절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목차

1	핵심 요약: 극단은 생각보다 적었다	03
2	실험 개요: 진보·보수 청년 7 인, '공정'의 언어로 3 시간	04
	가. 실험 목적 및 링(Ring)의 설계 원칙	04
	나. 공론장 운영 구조 및 3 대 의제	05
3	의제별 대화 분석: 겹치는 지점과 갈라지는 경계선	06
	가. [의제 1] 계엄 이후 처리와 '윤어게인' 현상의 실체	06
	나. [의제 2] 삼성 초과이익 분배와 복지 철학의 확장	08
	다. [의제 3] 차별 의제(교육·젠더)와 일상의 공정	10
4	설문 결과: 흔들리는 자기 기준과 인지적 속의	12
	가. 사전 설문: 절차적 공정성과 AI 에 대한 태도	12
	나. 사후 설문: 타인 이해도 향상과 입장 정련 효과	12
	다. 퍼실리테이터(인간 vs AI '저울') 평가 및 개입 기록	13
5	종합 평가: 합의가 아니라 '쟁점 지도'를 남기는 공론장	14
	가. 공론장의 효능감 검증 (갈등의 관리 가능한 전환)	14
	나. 인식 격차 축소 가능성 (입장의 전환보다 이해와 재검토)	15
	다. '극단'의 부재 — 성과인가, 표본 효과인가	15
	라. 실험의 구조적 한계점	
6	나가며: 후속 실험과 제도화를 위한 제언	17

1

핵심 요약: 극단은 생각보다 적었다

본 보고서는 정치 성향이 상이한 청년 7 인(사후 설문 응답 N=7)이 ‘공정’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계엄 이후 처리, 삼성 초과이익 분배, 차별(교육·젠더) 세 의제를 약 3 시간 동안 정면으로 다룬 실험적 공론장 ‘불편한 대화’의 1 차 파일럿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의 1 차 목적은 두 가지다.

- **공론장의 효능감 검증:**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대화 형식이,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관리 가능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지.
- **인식 격차 축소 가능성 타진:** ‘불편한 대화’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참여자들이 서로의 입장 근거를 이해하고 자기 인식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가. 주요 발견

- **효능감은 확인되었다.** 사후 설문에서 참여자(N=7)는 ‘다양한 관점 고려’(M=4.43)와 ‘타인 의견 이해’(M=4.14)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공론장 재참여 의사도 높게 나타났다.
- **인식의 ‘좁힘’보다 ‘재검토’가 일어났다.** 기존 입장 자체의 전환(M=3.86)보다는, 자기 입장을 더 명확히 정리하고 상대 근거를 이해하는 ‘인지적 숙의’ 효과가 두드러졌다. 일회성 설계의 구조적 한계로 해석된다.
- **‘극단’은 생각보다 적었다.** 기획 단계에서 상정한 극우적·대립적 발화는 면대면 환경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극우 현상’의 대표 기표로 지목된 ‘윤어게인’조차 참여자 다수는 이념적 신념이 아니라 밈·소셜미디어 소비 현상으로 거리를 두어 서술했다. 표본 특성(고학력·고소득 청년 편중)과 ‘면대면’ 형식의 완충 효과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 **AI 중재자(저울)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AI 는 사실 확인 용도로 소수 호출되었고(총 3 회 확인·경계선 질문 투입), 공정성·심리적 안전감 측면에서는 인간 퍼실리테이터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향후 설계는 ‘AI 활용 여부’보다 토론 구조와 상호작용 설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실험 개요: 진보·보수 청년 7 인, ‘공정’의 언어로 3 시간

가. 실험 목적 및 링(Ring)의 설계 원칙

(1) 목적

본 실험은 청년 세대가 공유하는 ‘공정’ 담론이 어떠한 정치적 의미와 태도로 연결되는지를 탐색하고, 공론장 참여 경험이 타 집단에 대한 이해도와 의견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다음 두 질문에 초점을 둔다.

- **효능감(Efficacy):** ‘불편한 대화’ 형식이 갈등을 회피·격화시키지 않고 생산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
- **인식 격차 축소(Convergence):**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공정’의 기준을 확인하고, 그 간극을 좁혀가는 계기를 얻는가?

(2) 설계 원칙

이 공론장은 ‘링(Ring)’이라는 개념으로 운영되었다. 합의문 도출을 목표로 하지 않고, 갈등을 회피하는 대신 관리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며, 결론 대신 ‘쟁점 지도’를 남기는 형식이다. 의제 선정 기준은 단 하나였다 — ‘청년 세대가 공정이라는 언어로 직접 감각하는 문제인가.’

남북 통일·노조 파업 등은 검토되었으나, 청년보다 윗세대의 이슈로 체감되고 이념 대결 구도로 쉽게 귀결된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최종 선정된 세 의제는 모두 ‘진보와 보수가 같은 공정의 언어를 쓰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는’ 지점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3) 운영 구조

일시·장소	2026년 5월 16일(토) 오후 3시~6시(약 157분, 3시간 4분 초과 진행) / 스페이스노들 K
참여자	정치 성향이 상이한 청년 7인(20~30대, 대학 재학생·졸업생 중심). 별도로 옵저버 다수 참관
퍼실리테이션	2인 체제 — 인간 퍼실리테이터가 발언 순서·감정 온도·흐름을 조율하고, AI 퍼실리테이터 ‘저울’이 사실 판단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로 한정 투입
의제	① 계엄 이후 처리 ② 삼성 초과이익 분배 ③ 차별 의제(교육·젠더)
측정	사전·사후 동일 설문(공정 인식, 민주적 규범 수용도, 상대 집단 태도, 시민 효능감, AI 수용 등 5개 영역) + 전 과정 녹음 기록

진행은 세 가지 질문 유형을 축으로 설계되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현상 인식) →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원인·구조) →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문제라고 보십니까’(경계선 질문). 마지막 ‘경계선 질문’이 이 대화의 핵심으로, 정답이 없기에 참여자가 각자 어디에 선을 긋는지를 드러내는 장치였다.

나. 공론장 운영 구조 및 3대 의제

각 의제는 ‘현상 인식 → 원인·구조 → 경계선’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아래는 의제별로 드러난 주요 논점과 대립축, 그리고 인식 격차가 확인·좁혀진 지점을 정리한 것이다. 각 의제 말미에는 이 공론장이 목표로 삼은 산출물 — 합의문이 아니라 ‘쟁점 지도’ — 를 ‘겹치는 지점 / 갈라지는 지점’ 형식으로 요약했다. 인용된 개별 발언은 익명 코드(A-G)로 표기하며, 발언 빈도가 아니라 입장의 예시로 읽어야 한다(한계점 5.5 참조).

3

의제별 대화 분석: 겹치는 지점과 갈라지는 경계선

가. [의제 1] 계엄 이후 처리와 '윤어게인' 현상의 실체

(1) 프레이밍

“계엄 자체의 옳고 그름보다, 그 이후 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각을 이야기한다”가 출발점이었다. 핵심 충돌축은 ‘처리 강도는 정의인가, 정치 보복인가’였다.

(2) 드러난 입장 스펙트럼

- **속도·강도:** 처리 속도에 대한 평가는 ‘느리다(문제)’와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사례라 오히려 신중히 처리되어 긍정적’으로 갈렸다. 같은 ‘느리다’ 안에서도 A 는 단순 지연으로, F 는 ‘표적·보여주기식’ 수사의 징후로 읽는 등 진단이 달랐다.
- **특검·수사 방식:** 일부 참여자(D·F)는 진행 중인 특검이 다수라는 점을 들어 ‘표적·몰아치기’ 우려를 표한 반면, 탄핵 찬성 입장(B)에서는 절차상 사회적 합의가 더 매끄러웠어야 한다는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제기했다.
- **폭력적 표출(서부법원):** 서부법원 사태를 두고 ‘법원 공격은 명백한 잘못이며 21 세기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데는 A·B·C·D·G 가 폭넓게 동의했다. F 는 그 배경으로 ‘한국 사회의 입법·사법에 대한 낮은 신뢰, 현직의 사법부 압박’ 등 삼권분립 훼손을 지목했다.
- **정치적 사면:** 전두환 사면 선례를 매개로 정치적 사면 찬반이 갈렸다. D 는 ‘역사적으로 늘 있어온 관례라 필요하되 무조건은 아니며 적용 기준·법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로 입장을 정교화했고, A 는 ‘관례가 아니라 협치 사유라면 찬성’, B 는 ‘관례를 근거로 한 사면은 반대하며 오히려 더 큰 사태를 부를 수 있다’, F 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나 사면 관례 자체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라고 보았다.
- **지역주의로의 확장:** 논의는 팬덤정치·지역 균형발전으로 확장됐다. F 는 지리·역사적 조건(항구·평지·산지)을 들어 ‘일률적 균등’보다 ‘지역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B 는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를, D 는 공기업 이전이 여전히 대도시 위주라며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3) ‘극우 현상’의 대표 기표 — 윤테이인을 어떻게 보았나

기획의 출발점인 ‘극우 현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건드린 대목이다. 주목할 점은, 참여자 다수가 ‘윤테이인’을 확산에 찬 이념 운동이 아니라 밈·소셜미디어 소비 현상으로 거리를 두어 서술했다는 것이다.

- E 는 ‘기성 세대·기존 정당에 대한 반발감과 소속감을 밈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C 는 ‘주변에는 없고 소셜미디어에서만 접했다’고, G 는 ‘밈으로 소비되는 것을 실감한다’고 평했다.
- D 는 지인 2 명을 예로 들며 ‘상식적 대화가 어렵다’면서도 그 원인을 이념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편향과 레거시 미디어 불신’이라는 미디어 환경에서 찾았다.
- F 는 가장 구조적인 진단을 내렸다.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하나의 암적 존재(예: 중국) 탓으로 환원하는 편의주의적 사고’가 배경이며, 복잡한 사회 문제로 다루는 것이 이번 정부의 과제라고 보았다.

함의

즉 참여자들은 극우를 ‘내 결의 신념’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위치시켰다. 이는 면대면에서 극단적 발화가 드러나지 않은 결과(4.3)와 정합적이며, ‘극단의 실재’와 ‘연출된 증폭’을 구분해야 한다는 이 실험의 문제의식을 뒷받침한다.

(4) AI(저울) 개입 — 팩트체크

인간 퍼실리테이터의 요청으로 AI 가 서부법원 사태를 사실 관계 중심으로 정리했다. ‘과잉’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프레임일 수 있음을 짚은 뒤(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 다수가 법원에 진입해 경찰·취재진·민간인에 폭력을 행사 → 경찰 다수 부상 및 다수 체포, 보수·진보 주요 언론이 모두 비판 사설 게재), 진행자는 ‘그렇다면 당신이 과잉이라고 느낀 지점은 정확히 어디였는가’를 되물어 사실과 감각의 출처를 분리하도록 유도했다.

사실검증 보정 사항 (편집자 주)

정치적 사면 논의 중 현장에서 언급된 ‘전두환 사면’의 시점 정보에는 연대 오류가 있었다(‘1970 년 선거’로 기재). 교차확인 결과, 전두환·노태우 특별사면은 1997 년 12 월 제 15 대 대선(12 월 18 일) 직후 당선자 김대중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임기 내 사면을 제안·건의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12 월 22 일 단행한 것이다. 당시 3 당 후보(김대중·이회창·이인제)가 모두 사면을 공약한 정황이 있었다. 본 보고서는 오류를 반영하지 않고 교정된 사실만 기재했으며, 이는 라이브 팩트체크 산출물에 대한 사후 검수 절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5) 쟁점 지도

겹치는 지점 (공통 감각)	갈라지는 지점 (경계선)
폭력: 서부법원 사태의 폭력은 잘못이며 민주주의 규범에 반한다(A·B·C·D·G).	강도: 처리 속도가 ‘느려서 문제’인가, ‘신중해서 긍정’인가.
규범: 삼권분립·사법부 독립에 대한 문제의식은 진영과 무관하게 공유됨.	수사: 특검·수사 방식이 ‘표적’인가, ‘과정상 미흡’인가.
극우: ‘윤여게인’은 신념이 아니라 밈·미디어 현상이라는 인식이 우세.	사면: 정치적 사면의 정당성 — 관례·협치·법적 기준 중 무엇을 근거로 삼을 것인가.
	지역: 균형발전은 ‘일률적 균등’인가 ‘지역적 고려’인가.

나. [의제 2] 삼성 초과이익 분배와 복지 철학의 확장

(1) 프레임

“삼성이 수십조를 벌었다. 그런데 내 취업 기회와 월급은 그대로다. 이게 정상인가.” 핵심 충돌축은 ‘공정(공공의 정의) vs 사정(나도 저 파이를 원한다)’이었다.

(2) 드러난 입장 스펙트럼

- **‘절차적 공정’ 진영:**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 — 호황·투자·R&D의 결과인 초과이익 환수는 부당하며, 삼성은 이미 세금(법인세·상속세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A·B·E·F). E는 이중과세·주주 등 이해관계자 문제를, F는 상속세율(약 24%)이 OECD 상위권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구조·기여’ 진영:** 성장기 국가의 부지·전기·물 등 특혜가 누적된 결과이므로 시장 논리만으로 볼 수 없으며,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 요구는 자연스럽다(G). G는 ‘삼성이 대기업이 된 것은 절차적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 **‘개입 범위’ 논쟁:** 노사 갈등에 정부가 일찍 개입했어야 하는가(D) vs 개입 기준이 자의적이라 자본시장 왜곡·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F). 같은 참여자(D) 안에서도 ‘큰 정부·정부 조기 개입’과 ‘삼성은 국민의 기업이 아니므로 1/n 현금 배분은 사회주의’라는 입장이 공존하며 비일관성이 노출됐다.
- **초과세수 활용:** ‘1 인당 현금 배분(기본소득)’ vs ‘중소기업·스타트업·반도체 재투자’. A·D·F는 1/n 배분에 회의적이었고, 논의는 순환경제 효과, 지역 균형·취업 문제 우선순위로 확장됐다.
- **복지 철학으로의 확장:** 논의는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맞춤형 복지, 사회 안전망 강화로 번졌다. D는 ‘중위소득 기준보다 소외계층 집중이 효율적’, A는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F는 ‘뿌리는 방식의 복지보다 안전망을 두텁게’라고 주장했다.

(3) AI(저울) 개입 — 경계선 질문과 사실 확인

- 저울이 ‘기업은 국가 없이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경계선 질문을 투입해, ‘삼성의 성과는 순수한 역량의 결과인가, 국가 기여의 산물인가’라는 대립을 명시적 논점으로 끌어올렸다.
- ‘한국 일자리가 실제로 부족한가’를 사실 확인 대상으로 삼아, 체감(청년이 가고 싶은 일자리와 갈 수 있는 일자리의 괴리)과 통계적 사실을 분리하도록 유도했다.

(4) 관찰

- **공정 기준의 비일관성이 가시화되었다.** ‘공정’이 단일 원칙이 아니라 상황 의존적 감각임을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다. 동일인이 의제에 따라 다른 공정 기준을 적용하는 지점이 포착되었는데, 특히 삼성 의제에서 ‘기업 내부 문제는 외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절차·비개입 논리를 강조한 A가, 교육 의제(2.3)에서는 ‘학벌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인맥·부모 자본의 벽’과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선’을 인정하며 구조적 격차 쪽으로 이동한 것이 대표적이다.

- **진영 내부의 균열.** ‘같은 진보 감각인데 방향이 다른’ 지점(예: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한 청년·비정규직의 반감)이 드러나며, 진영 이분법으로 환원되지 않는 결이 확인되었다.

(5) 쟁점 지도

겹치는 지점 (공통 감각)	갈라지는 지점 (경계선)
경쟁력: 삼성의 산업 경쟁력·대기업 유지 필요성 자체엔 큰 이견 없음. 배분방식: ‘전 국민 1/n 현금 배분’에는 대체로 회의적(A·D·F).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존재한다는 명제엔 넓은 공감.	환수: 초과이익 추가 과세가 ‘횡재세’로 정당한가, 이중과세·재산권 침해인가. 기여성적: 삼성의 성과는 ‘순수 역량’인가 ‘국가 특혜의 산물’인가. 개입: 정부 개입의 시점·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자의성 문제). 복지: 선별주의냐 보편주의냐, 안전망 강화냐 현금 지원이냐.

다. [의제 3] 차별 의제(교육·젠더)와 일상의 공정

(1) 프레임

“정치의 공정, 경제의 공정을 이야기했다. 이번엔 일상의 공정이다.” 교육 사다리·문화자본, 데이트 비용·페미니즘을 통해 ‘앞선 두 의제의 공정 기준이 일상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가’를 점검했다.

(2) 드러난 입장 스펙트럼 - 교육

- **기회의 개방성:** 다수 참여자가 ‘아직 사다리는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A·B·C·F). C·A 는 지방 출신으로 공교육만으로 상경한 사례를 들었고, F 는 공교육·EBS 자원을 근거로 들었다.
- **격차의 소재 이동:** 동시에 ‘대학 입학 이후’의 격차 — 부모 지원에 따른 대외활동·인맥·인턴 기회 — 가 더 크다는 지적이 A·C·D 에게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D 는 ‘같은 학교라도 부모의 사회 계층에 따라 갖고 나가는 것이 다르다’고 짚었다.

- **로스쿨·전문직 진입:** ‘장학금·정원 확대로 오히려 접근성이 개선됐고 사시보다 공정하다’(F) vs ‘엘리트 이미지와 계층 간극이 여전하다’(G·C),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E)로 갈렸다.

(3) 드러난 입장 스펙트럼 - 젠더

- **데이트 비용:** ‘반반이 건강한 관계’(F)와 ‘비용을 계산적으로 따지지 않는 것이 건전’(A), ‘관계 안에서 알아서 정할 문제’(E·G)로 나뉘었으나 대체로 온건하게 수렴했다.
- **페미니즘 인식:** A 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낙인이 되고 밈으로 조롱되면서 문제의식이 희석됐다’고 진단했다.
- **병역:** D 는 ‘군 복무 시간이 아깝다(다만 억울함은 아니다)’, B·D 는 ‘여성 징병제 반대 — 남성이 복무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여성 징병을 요구하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F 는 병역 담론이 페미니즘에 대한 반작용과 얽혀 있다는 가장 날 선 진단을 내렸으나, 면대면에서 격화되지는 않았다.

(4) 관찰

진행자의 가설은 부분 기각되었다. ‘교육 격차가 극우적 인식의 시발점’이라는 진행자의 완곡한 반론에도, 참여자들은 대체로 ‘우리 사회는 아직 열려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유지했다. 진행자 스스로 ‘통념보다 다행’이라고 반응할 만큼 예상된 좌절·냉소가 적었다.

(5) 쟁점 지도

겹치는 지점 (공통 감각)	갈라지는 지점 (경계선)
입시단계: 고교·입시 단계까지는 ‘사다리가 열려 있다’는 인식이 다수(A·B·C·F). 사교육: 사교육 과열은 문제이나 교육제도만의 문제로 환원하긴 어렵다(F). 데이트: 비용 문제는 관계 내부에서 조율할 사안이라는 온건한 수렴.	격차위치: 결정적 격차가 ‘입시’인가 ‘대학 이후(자본·인맥)’인가. 전문직: 로스쿨은 ‘더 공정’인가 ‘엘리트 재생산’인가. 젠더: 병역·페미니즘을 ‘구조 문제’로 볼지 ‘개인·관계 문제’로 볼지.

4

설문 결과: 흔들리는 자기 기준과 인지적 숙의

사전·사후 동일 문항(5 점 척도) 설문을 통해 공정 인식과 태도 변화를 측정했다. 유효 응답 N=7.

가. 사전 설문: 절차적 공정성과 AI 에 대한 태도

- **이슈 관심·정보 판단:** 응답자의 87.5%가 게임·기업 초과이익·차별 이슈를 중요하게 인식하며, 정보의 신뢰성을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
- **공정 인식의 기본값:** 결과의 평등보다 ‘절차의 공정성’과 ‘노력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함.
- **의제별 온도차:** 게임 관련 책임 규명에는 참여자 전원이 동의한 반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에는 신중한 태도.
- **AI 태도:** 생성형 AI 의 유용성은 인정하나, 정보 편향 가능성을 경계.

나. 사후 설문: 타인 이해도 향상과 입장 정련 효과

공론장 참여 후 측정한 핵심 지표는 다음과 같다(5 점 만점).

다양한 관점 고려		4.43
타인 의견 이해		4.14
기존 입장 재검토		3.86
더 명확한 입장 형성		3.86

해석: ‘다양한 관점 고려’와 ‘타인 의견 이해’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기존 입장 재검토·명확화’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이번 공론장은 입장의 전환(설득)보다 상대 이해와 자기 입장의 정련(인지적 숙의)에서 효과를 냈다. 공론장 재참여 의사도 높게 나타나, 형식 자체에 대한 만족과 효능감이 확인되었다.

다. 퍼실리테이터(인간 vs AI '저울') 평가 및 개입 기록

- 인간 중재자와 AI 중재자 모두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존재로 평가됨.
- 공정성 및 심리적 안전감 측면에서는 인간 중재자가 AI 중재자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음. AI 중재자의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설계에서는 ‘AI 활용 여부’보다 토론 구조와 참여자 간 상호작용 설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AI 퍼실리테이터는 인간 진행자의 호출로만 등장했고, 의견 중재가 아니라 사실 확인과 경계선 질문에 한정 투입됐다.

실제 개입은 크게 세 차례로 정리된다.

- ① **서부법원 사태 사실 정리 (의제 1).** ‘과잉’이라는 표현이 프레임일 수 있음을 짚고 사건 경과를 중립적으로 정리 → 진행자가 ‘과잉이라 느낀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가’로 되물어 사실과 감각을 분리.
- ② **경계선 질문 ‘기업은 국가 없이 성장할 수 있는가’ (의제 2).** 삼성의 성과를 ‘순수 역량 vs 국가 기여의 산물’로 보는 대립을 명시적 논점으로 부각.
- ③ **‘한국 일자리가 실제로 부족한가’ 사실 확인 (의제 2).** 체감과 통계를 분리하도록 유도. 다만 라이브 사실검증에서 연대 오류(전두환 사면 시점)가 발생해, 사후 검수의 필요성을 남겼다(2.1 편집자 주 참조).

5

종합 평가 : 합의가 아니라 ‘쟁점 지도’를 남기는 공론장

가. 공론장의 효능감 검증 (갈등의 관리 가능한 전환)

세 가지 근거가 효능감을 뒷받침한다.

- **갈등의 ‘관리 가능한 전환’이 작동했다.** ‘경계선 질문’과 2인 퍼실리테이션 구조는 가장 첨예한 의제(게임·초과이익)에서도 대화가 격화되거나 붕괴되지 않게 했다. 참여자는 ‘대화의 흐름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전감 속에서 발언했다.
- **면대면 형식의 완충 효과.** 익명 온라인 공간에서라면 격해졌을 발화가 ‘얼굴을 보고 마주 앉아’ 정제되었다. 한 읍저버의 표현처럼, 이는 ‘이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를 생각해서 말하는 법을 연습하는 자리’로 기능했다.
- **높은 재참여 의사.** 사후 설문 of 재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나, 형식 자체가 지속 가능한 시민 공론 모델로 제도화될 여지를 보였다.

“극우적인 발언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으나, 실제로 그런 사람을 학교에서 보기가 매우 어렵다 … 오늘 그 섬세함이 굉장히 잘 드러난 것 같다.” — 읍저버(대학 소속)

“얼굴 보고 대화하는 자리가 필요한 이유 … 좀 더 정제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를 생각해서 말을 하는 법을 연습하는 자리였다.” — 읍저버

나. 인식 격차 축소 가능성 (입장의 전환보다 이해와 재검토)

이번 파일럿에서 입장 자체의 전환(설득)은 제한적이었다(M=3.86). 이는 실패가 아니라, 일회성·3시간 설계의 구조적 귀결이자 본 실험의 설계 철학과도 일치한다. 기획 단계에서 명시했듯, 이 자리는 ‘누가 이기는 자리도, 합의문을 쓰는 자리도 아니다.’ 남는 것은 ‘우리가 이 주제에서 어디서 갈라지고 어디서 겹치는지에 대한 지도 한 장’이다. 대신, 격차 축소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변화가 분명히 나타났다.

- **상대 근거의 이해(M=4.14):**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는 것’ — 기획안이 성공 기준으로 제시한 바로 그 지점이 달성되었다.
- **자기 기준의 가시화:** 동일인이 의제에 따라 다른 공정 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2.2의 A 사례 참조)이 본인과 타인 모두에게 드러나며, ‘내 기준이 생각보다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자각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 **이분법의 해체:** ‘민주당=좌파’, ‘페미니즘=단일 입장’, ‘윤여게인=확신에 찬 극우’ 같은 통념이 대화 속에서 복합화되었다. 평소의 단어·기준으로 서로를 재단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사회로 가는 조건임이 체감되었다.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맞지 않을 수 있다는 확인해 가는 과정들이 계속 필요한 것 아닌가.” —

옴저버

다. ‘극단’의 부재 — 성과인가, 표본 효과인가

기획의 출발점은 ‘극우 현상’이었으나, 정작 대화에서 극단적 발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상징적으로, ‘극우’의 대표 사례로 지목되던 ‘윤여게인’조차 참여자들은 밈·소셜미디어 소비 현상으로 서술하며 자신과 분리해 관찰했다(2.1 참조).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면대면 공론장 형식 자체가 극단을 완화한다는 긍정적 신호다. 둘째, 동시에 표본의 한계이기도 하다. 참여자는 주로 대학 재학생·졸업생으로 고소득 가구 출신 비중이 높아, 본 결과는 ‘고학력 청년층’의 공정 인식으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 한 옴저버 역시 ‘비슷한 그룹 내에서 모집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진행자의 마무리 또한 이 긴장을 담았다: ‘극우적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몇몇 극단적 퍼포먼스를 통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 즉, 갈등의 실재와 그 ‘연출된 증폭’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공론장의 효용일 수 있다.

라. 실험의 구조적 한계점

(1) 일회성 설계

단회 3 시간 공론장은 기존 정치적 태도를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측정된 효과는 ‘태도 전환’보다 ‘인지적 숙의’에 가깝다.

(2) 표본의 편중

고학력·고소득 청년 중심 표본으로, 극우·극단 인식의 부재를 ‘사회 전반의 상태’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다른 집단으로 구성된 동일 실험이 필요하다.

(3) 정보 자극의 비통제

참여자별로 사전 정보·준비 수준이 달라, 발언이 ‘공정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보량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리되지 않았다.

(4) 소표본 설문(N=7)

통계적 추론보다 경향 파악 수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5) 녹취 기록·사실검증의 제약

현장 배경음(BGM) 등으로 일부 참여자 발화가 명료하게 수집되지 않았고, 특정 참여자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기록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녹취 기반 인용(A-G)은 개별 입장의 예시로 읽어야 하며, 발언 빈도를 집단의 대표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라이브 사실검증에서 연대 오류가 확인되어(전두환 사면 시점), 관련 내용은 사후 교차확인을 거쳐 반영했다.

6

나가며: 후속 실험과 제도화를 위한 제언

(1) 역할 부여 + 정보 통제 설계

참여자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하고 동일한 정보 자극물을 제공한 뒤, 입장 정리 시간과 발언 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연구 설계를 수정한다. 이를 통해 정보 조건이 통제된 상태에서 공정 인식과 태도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표본 다변화

고학력·고소득 외 집단(비대졸·지역·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평행 세션을 운영해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3) AI 역할 재정의 + 검수 절차

AI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AI 활용 여부’가 아니라 토론 구조와 상호작용 설계에 자원을 집중한다. AI 는 사실 확인이라는 좁은 보조 역할로 유지하되 호출 시점·방식을 정교화하고, 라이브 산출물에 대한 사후 검수 절차를 둔다.

(4) 종단 측정

일회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동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세션 또는 사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추적 설문을 도입한다.

(5) 제도화 경로

재참여 의사가 높은 만큼, 하반기까지 복수의 세션을 운영해 반복 가능한 시민 공론 모델로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